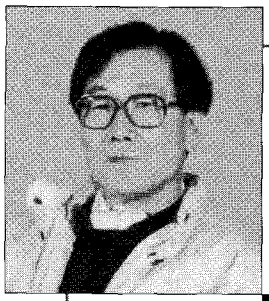

김동민 /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생각이 바뀌어야만 환경이 보전된다

우리의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연과 그속의 생활환경이, 절제되지 않는 훼손행위와 오염물질배출로 인하여 해가 다르게 악화돼가고 있다. 우리는 1961년 이래로 「잘살아보세」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개발에 매진하였고, 그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소비생활의 성과였을뿐, 전반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됐다. 탐욕스럽고 거칠고 타락한 인간의 심성, 탁한 공기와 탁한 물과 널려있는 쓰레기와 께름칙한 식품들, 그러한 환경속에서 그렇게 변모한 인간들이 갑절로 늘어나 벌이는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와 사회악들….

그것은 정녕코, 그당시 우리가 바라던 모습의 성과는 아니었다.

인간성 변모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왜 우리의 환경이 이토록 악화됐고, 악화의 진행마저 멈추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는 환경악화를 다스리기 위한 법률 · 기구(機構) 등 제도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투자미흡(投資未洽)의 원인도 있다. 그러나 환경훼손과 오염의 행위자(行爲者)인 국민들의 의식에, 그리고 또한 제도와 투자를 다루는 정부공무원들의 의식에 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 고로, 그러한 의식 또는 생각을 이 시대에 걸맞게 바꾸려는 노력이 진실되게 선행되지 않는한, 우리의 환경보전은 가망이 없다.

이기심에 대하여

우리국민의 이기적 성향(性向)은 유별나다.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 지역이기주의, 이런 이기심들의 발로가 타협없는 경직된 행동으로 일관되다가, 끝내는 전체의 이익체계붕괴로 이어지고, 구성원 모두가 손해를 입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본다. 그럴 때에도(모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의 손해보다 남의 손해가 더 클 경우 은근히들 만족해 한다. 거기에 우리 이기심의 「유별남」의 특성과 어리석음이 있다. 이웃간의 싸움에서, 기업체내의 노사분규(勞使紛糾)에서, 정치인들의 파당싸움질에서 그러한 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

또 하나의 이기적 성향은, 「나 하나 쯤이야」하고 남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동이다. 이 경우는, 앞에서와는 달리 숨어서 행동한다. 전체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망가뜨리는 줄 알면서,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을 거역하면서, 당장의 내 이익과 편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그러한 꼴을 우리는 주변의 얌체행위에서 그리고 들킨 범죄행위와 들키지 않은 범죄행위에서 역시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이러한 이기심들은, 그것이 유별난 것이든 숨어서 하는 것이든, 우리의 국토환경보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자연개발(가야산 위락단지조성 같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개설되는 골프장 · 스키장 · 위락시설, 하천수질관리를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분쟁, 내 동네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쓰레기 몰래 버리기와 폐수 몰래 흘리기와 밀렵 · 밀채취…. 이런 행위들은 그 모두가, 공동체보다는 개인 · 개개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무지와 아집과 탐욕이 뒤엉킨, 이기심의 발로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환경은, 그간에 쏟아부은 제도적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가 다르게 악화돼 왔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나라밖으로부터 죄어오는 지구규모의 기상이변과 맞물려, 마침내 재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이기심이 그 정도로 유난하고 파렴치하게 된 배경으로는 근대사를 통틀은 대충 다음과 같은 사회적 요인(要因)들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중앙집권층의 무능과 부패, 백성들의 생활과 안녕을 돌보기보다는 그런 집권층의 비위를 맞추며 수탈을 일삼은 지방관리들, 부패와 수탈과 잦은 난리속에서 그나마 믿을 곳이라곤 오직 나와 나의 피붙이와 조금이라도 공통점을 나눠갖은 나의 집단밖에 없게 됐던 그간의 내력, 붕괴된 전통적 가치관 등등…. 그렇더라도 이제 얼마 안됐지만 국민모두가 민주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제야말로 그 모든 악폐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책임이행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실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구는, 국민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냉정히 생각하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간에 내 환경권리만을 소리높여 주장해 온 반면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거의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유난하고 파렴치한 이기심의 발로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어른들의 그러한 행동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들인 초중고 학생들마저 오염시키므로써, 학교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실시한 「환경교육」의 효과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하여 어른들 행동의 그런 오염파급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장래 국민들의 장래행태를 「환경보전형」으로 이끄는 일이 거의 무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매스컴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행정부의 공무원들과 탐욕에 눈이 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매도하고 있고, 더러는 사법부의 판사들에게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 말대로, 우리의 행정부는 부패한 공무원들이 점차로 우점종(優占種)이 되면서 조직이 병들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환경보전은 거듭 말하거니와, 그간에 쏟아부은 제도적 노력과 투자의 효과마저 못

거뒀다. 공무원조직의 부패는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한층 더한 부패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몫의 책임이행이 안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치권력의 구성원들, 즉 그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것은 국민이다. 고로 세상이 민주화된 오늘날, 국가몫의 환경보전책임이 적절히 이행되지 못한 근본원인은, 역시 국민에게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구태의연하게 혈연 · 지연 · 학연 · 무슨연하는 파벌에 의하거나 돈을 받고 특정의 국회의원 · 광역의원 ·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만하고 효율적인 환경보전기능을 수행케 하는, 국민의 간접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자

우리는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자연을, 지배와 수탈의 대상으로 봐 온 기존의 인식을 버리고, 섬기고 모셔야할 주인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신속히 행동으로 옮겨야만 눈앞으로 다가온 환경재앙을 줄일 수 있다. 「…해야한다」는 말을 너무 써서 송구스럽지만 그만큼 사정이 급박하다.

우리 국민을 포함한 지구상의 인간들이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자연관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이른바 기계적 패러다임이다. 기계적 패러다임이란, 17세기에 서유럽에서 시작된 사상으로, 자연을 부품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일정법칙대로 움직이는 마치 거대한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는 세계관이다. 그런 세계관에서 자연은 인간의 조정을 받아가며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계와 같은 하찮은 피지배(被支配)의 것에 불과하다. 유럽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자연의 여러 요소들을 과학의 힘으로 그리고 인간의 의지대로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유럽인들이 과학혁명 ·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게된 지나간 300년동안에, 기계적 패러다임은 범지구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가 돼버렸다. 그리고 자연은 황폐해지고 오염되어, 이제는 그 반작용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거대한 재앙의 모습이 됐다.

유럽인들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자연정복형의 기독교적사상이 깔려 있다(구약성서 창세기제1서 · 제9서). 그러나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동양의 종교들과 사상은 하나같이 자연순응 내지는 자연공생형이다. 인간을 어디까지나 자연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배우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다(힌두교, 불교, 도교, 천도교, 유교). 옛 우리조상들은, 나무하나에도 신령이 깃들고 있는 것으로 여겼고, 뜨거운 물을 버릴 때에도 벌레있는 곳을 피하거나 미리 그들에게 경고한 후 버리곤 했다. 그러던 자연존중의 문화가 서양물질문화에 지배되면서 실종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서양의 지식인들이, 그들의 기계적 패러다임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자연공생형의 이른바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1992년 Rio의 LIN 환경개발회의). 그리고 그것과 때를 맞춰 동양의 종교 · 사상이 21세기문명을 이끌 새로운 대안(代案)으로 급속히 지평을 넓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버렸던 자연공생형의 옛 가치체계를 되찾고, 이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맺는 말

21세기는 인구과밀 · 자원고갈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환경재앙을 피해야 하는 시대이다. 그런 시대에는 고도의 효율과 신속성을 발휘하는 즉, 21세기형 적응력이 높은 국가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대열에 끼려면 먼저 의식전환이 있어야만 한다. 정직하게 그리고 뿌리부터 생각을 바꿔 행동하는 그런 의식전환 말이다.

(1998. 11. 8)